

2012. 2. 7

뺏겨 걸린 한국경제, 탈출구는?

고영선

Korea's Leading Think Tank





C O N T E N T S

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

한국경제의 덫

한국경제의 탈출구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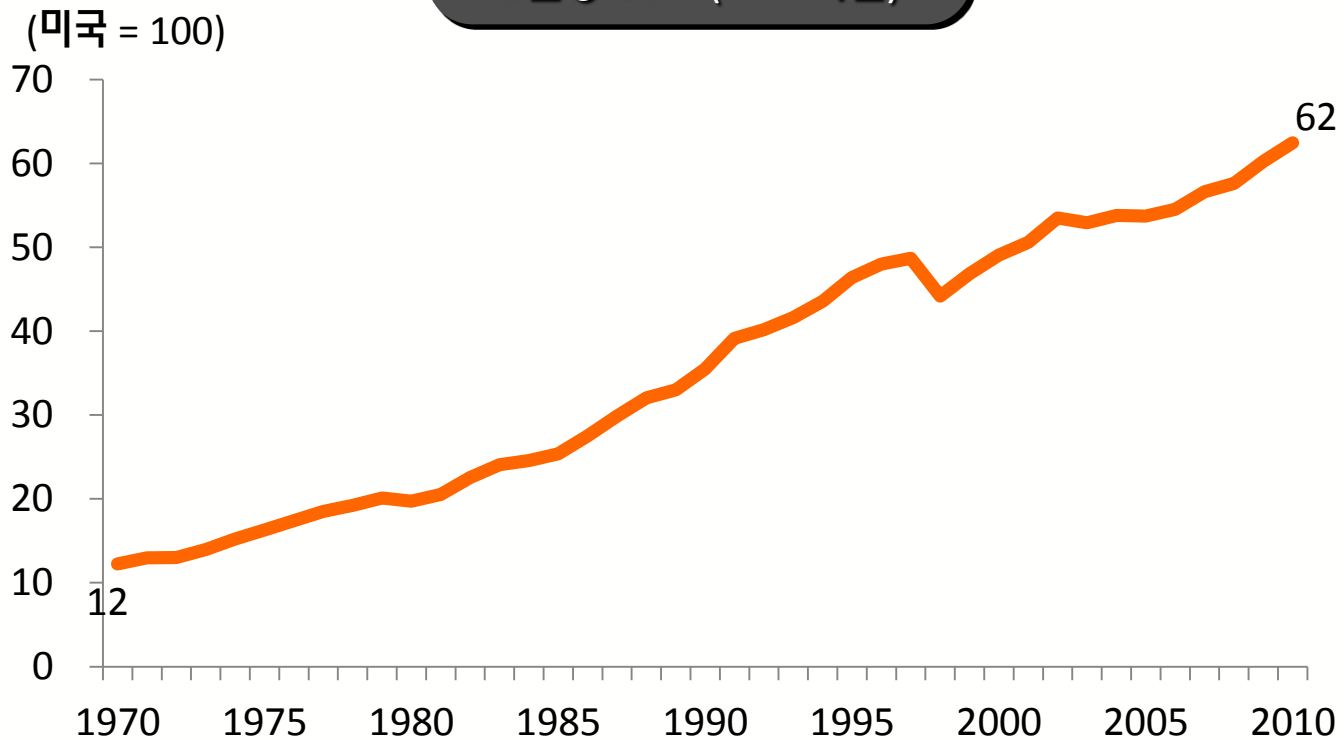


한국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



우리 경제는 그 동안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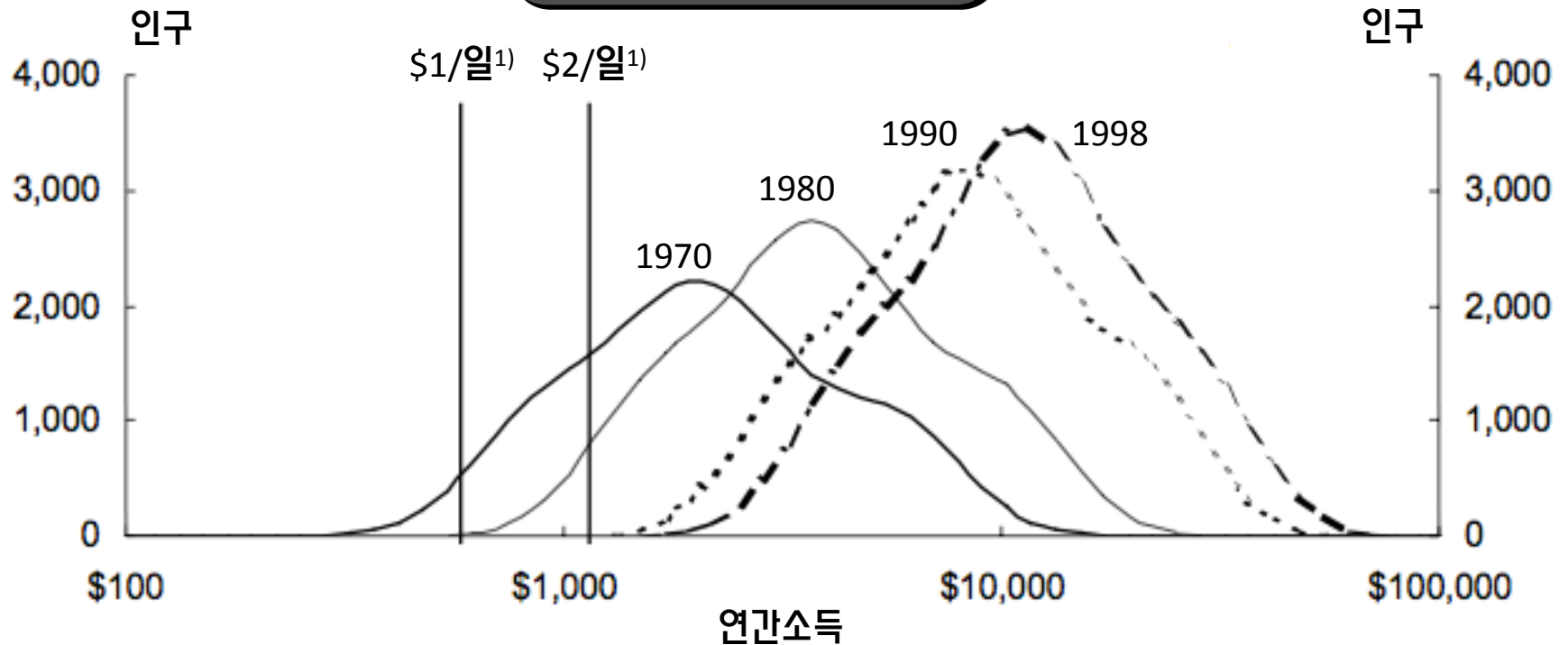
1인당 GDP (PPP 기준)



자료: OECD.

- 1인당 GDP는 1970년 미국의 12%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 62%에 도달

소득분포의 변화



주: 1) 절대빈곤선(1985년 가격 \$1/일 또는 \$2/일에 해당하는 연간소득 수준(1996년 가격).

자료: Sala-i-Martin and Mohapatra, "Poverty, Inequality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the Group of 20," 2003.

- 빠른 경제성장의 결과, 1990년경에는 절대빈곤이 사실상 소멸

그러나 중장기 성장전망은 낙관적이지 못함.

■ 중기적으로는 선진국의 경기부진으로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이 느릴 전망

-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 경기침체가 지속
- 위기는 과도한 수준의 부채에서 발생하였는데, 2008년 이후에도 많은 나라에서 부채는 오히려 증가

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중

- 노동인구 감소, 저축률 하락
 - 추격형(“catch-up”) 성장단계의 종료
- 생산성과 혁신능력의 중요성이 증가

주요국의 부채¹⁾ 변화

(단위: GDP 대비, %)

	2000-2008	2008-2011 2/4
일본	36.5	38.9
프랑스	88.8	35.4
스페인	145.2	25.6
영국	177.2	20.3
캐나다	38.5	17.0
이탈리아	67.8	11.5 ²⁾
독일	7.2	1.2
한국	91.4	-15.5
미국	75.2	-16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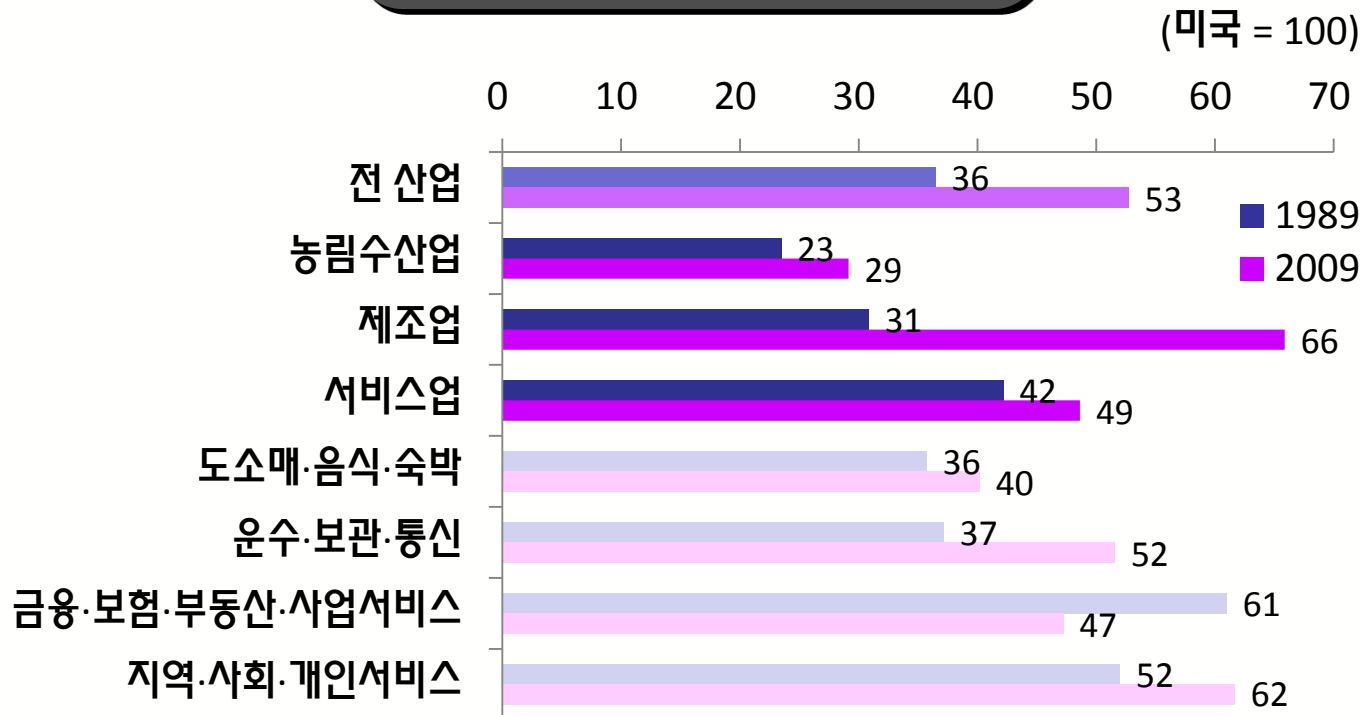
주: 1) 가계, 기업(금융 및 비금융), 정부의 부채 합계.
2) 2008-2011 1/4.

자료: McKinsey Global Institute, *Debt and Deleveraging: Uneven Progress on the Path to Growth*, 2012. 1.

1990년대 이후 제조업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

- 1989~2009년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(100) 대비 큰 폭(31→66) 증가
 - 반면 농업(23→29), 서비스업 (42→49)의 노동생산성 증가는 미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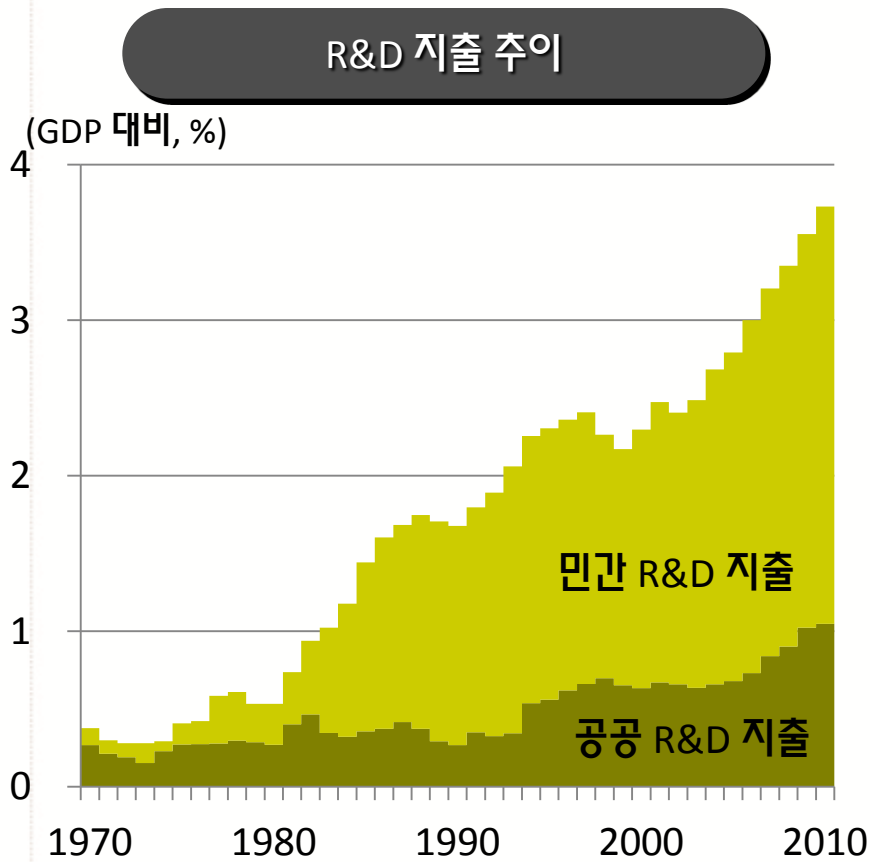
1인당 부가가치(PPP 기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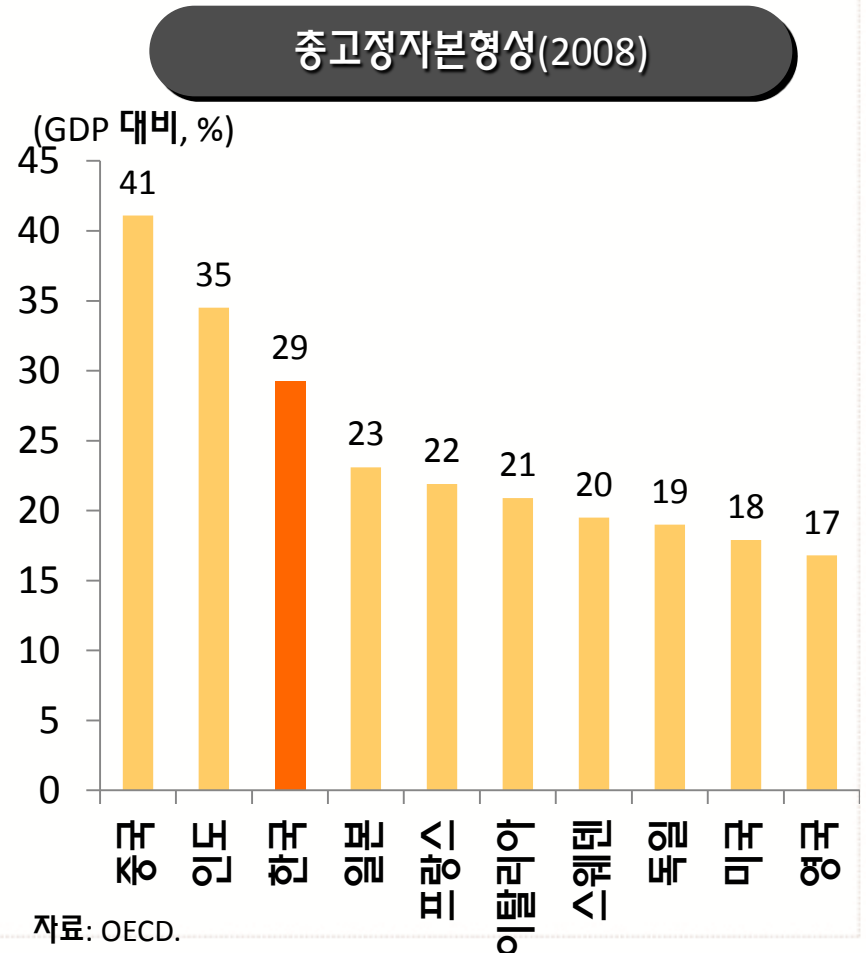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 STAN Database.

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원천(1): 기술과 자본의 축적

■ 높은 수준의 R&D 지출과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이 빠르게 축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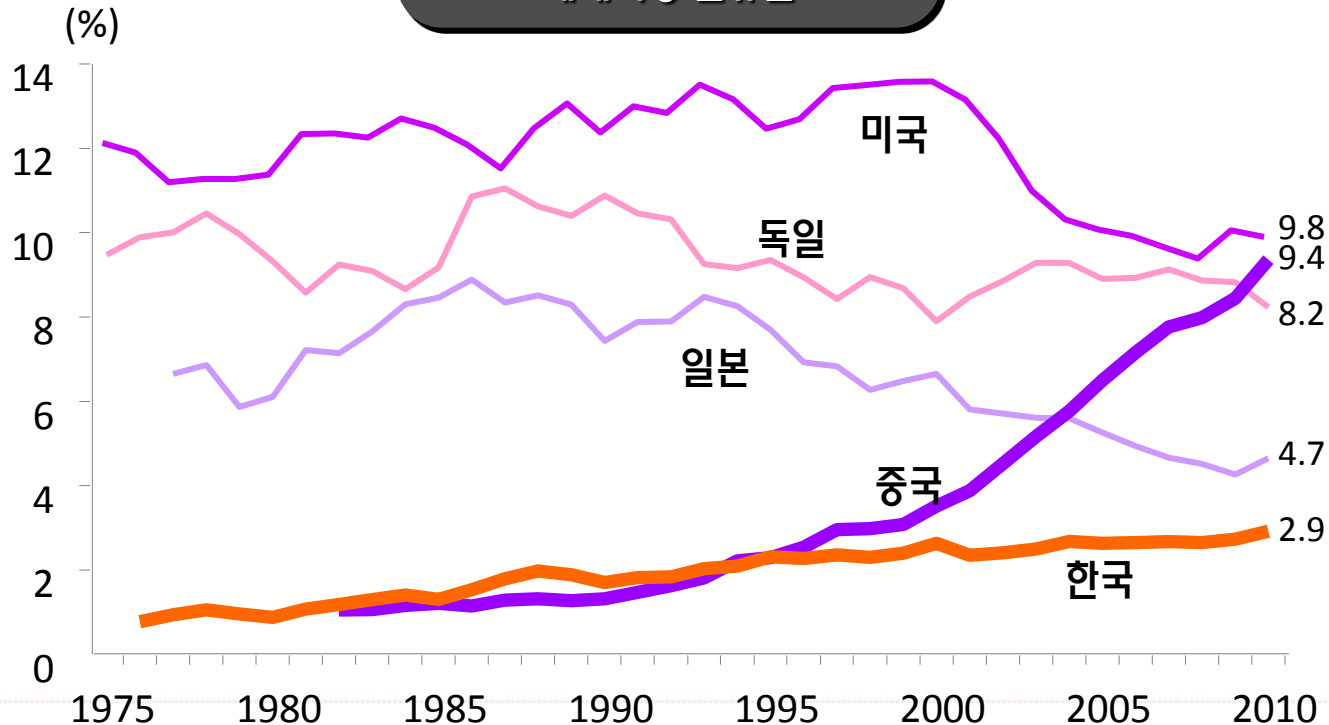
자료: 과학기술통계서비스(<http://sts.ntis.go.kr>).



자료: OECD.

- R&D, 생산, 디자인, 마케팅 등 모든 분야에서 끊임 없는 혁신이 불가피
 - 특히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부상으로 인해 한국은 부가가치가 보다 높은 산업으로 계속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(Gill and Kharas, 2006)

세계시장 점유율



자료: World Bank.



한국경제의 뒷

■ 초·중등 교육은 학력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

- 중2 학생의 IEA TIMSS 순위(2007, 48개국): 수학 2위, 과학 4위
- 고1 학생의 OECD PISA 순위(2009, 65개국): 읽기 2위, 수학 4위, 과학 6위
 - 도시(상하이) 혹은 도시국가(싱가포르, 홍콩)를 제외할 경우 각각 1위, 1위, 3위

■ 그러나 선행학습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장기적 효과는 의문시

- IEA TIMSS의 흥미 및 자신감은 매우 낮은 수준
 - 수학 관심도 44위, 자신감 43위, 과학 관심도 29위, 자신감 27위
- OECD PISA의 학습시간당 수학성적 61점(OECD 평균 75점)

■ 학교와 교사의 책임과 자율 미흡

- 교장과 교사들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 부족
- 교과과정의 다양성 부족

특히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낙후는 심각한 수준

■ 대학교육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질적 확충이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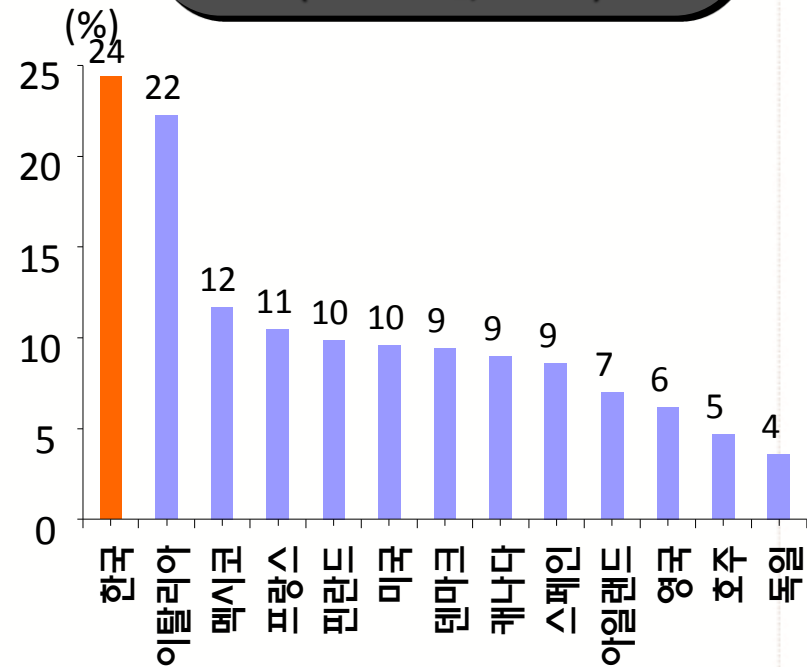
- IMD 대학 경쟁력 순위(2011, 59개국)
 - 싱가포르 2, 홍콩 17, 대만 19, 한국 39위
- 세계 200위에 포함된 대학 수 (2010/2011)
 - 미국 72, 영국 29, 중국 6, 한국 4개

■ 노동시장과의 연계 역시 부족

- 대졸자 중 NEET의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

■ 이해집단의 반발로 교육개혁은 험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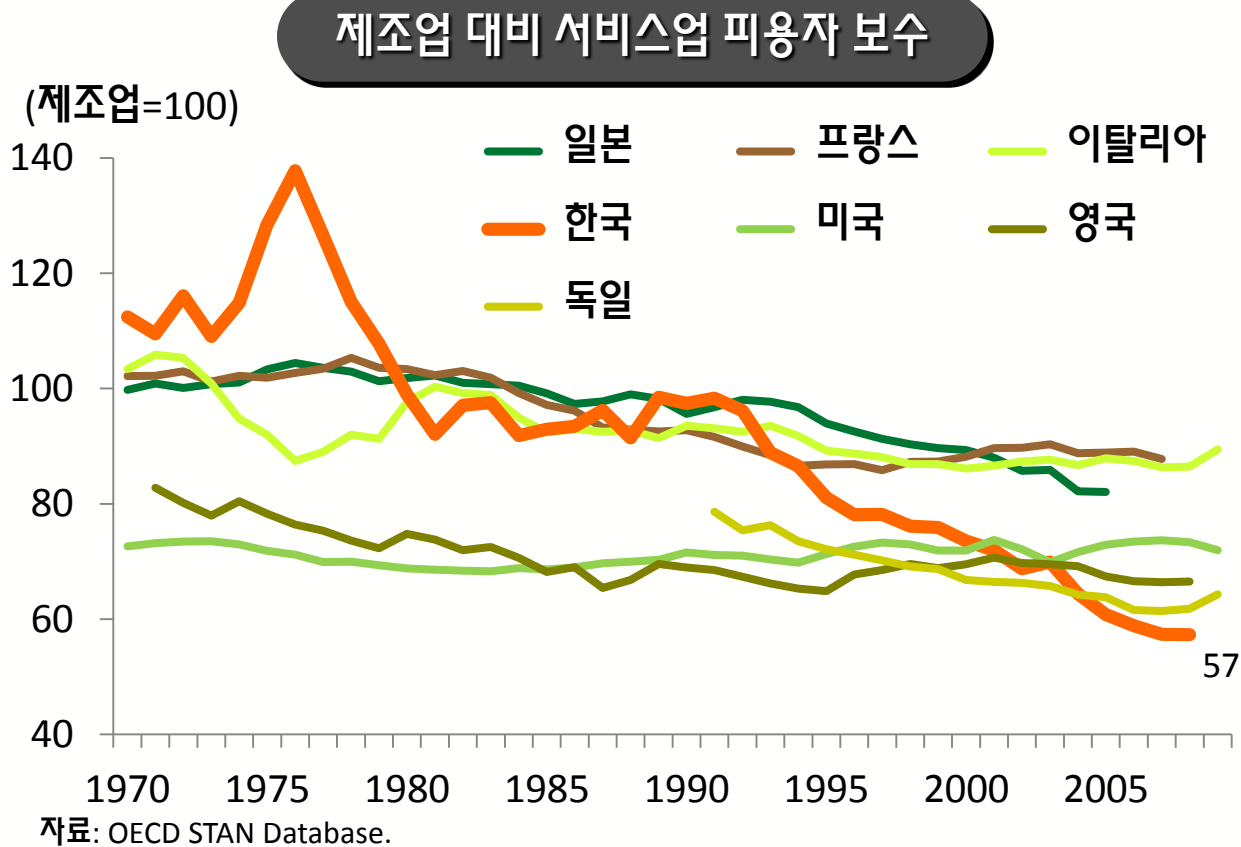
대학졸업자 중 NEET의 비중 (15~29세, 2004)



주: NEET는 근로, 교육, 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(neither in employment nor in education or training). 한국 및 뉴질랜드 2005년, 영국 2003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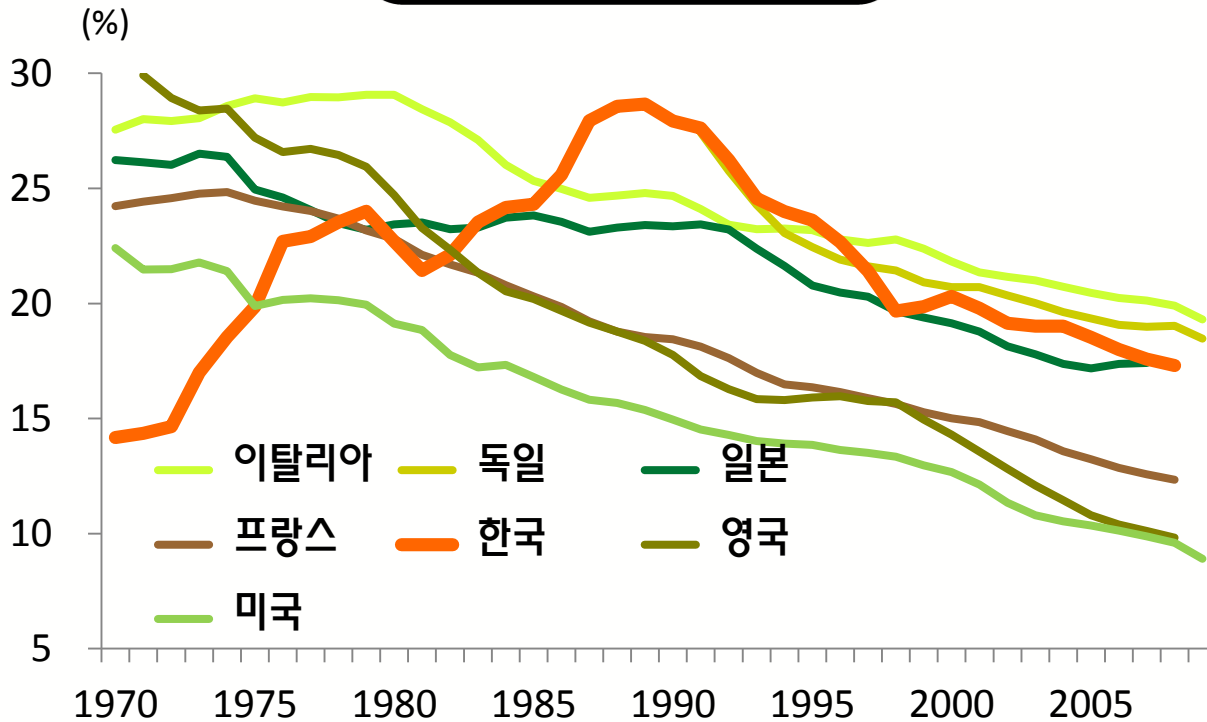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, *Economic Surveys: Korea*, 2008.

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임금은 1990년대 초부터 급격히 하락



- 제조업 노동생산성 향상 → 탈산업화(“de-industrialization”)
 - 저숙련 근로자는 서비스업 고용으로 흡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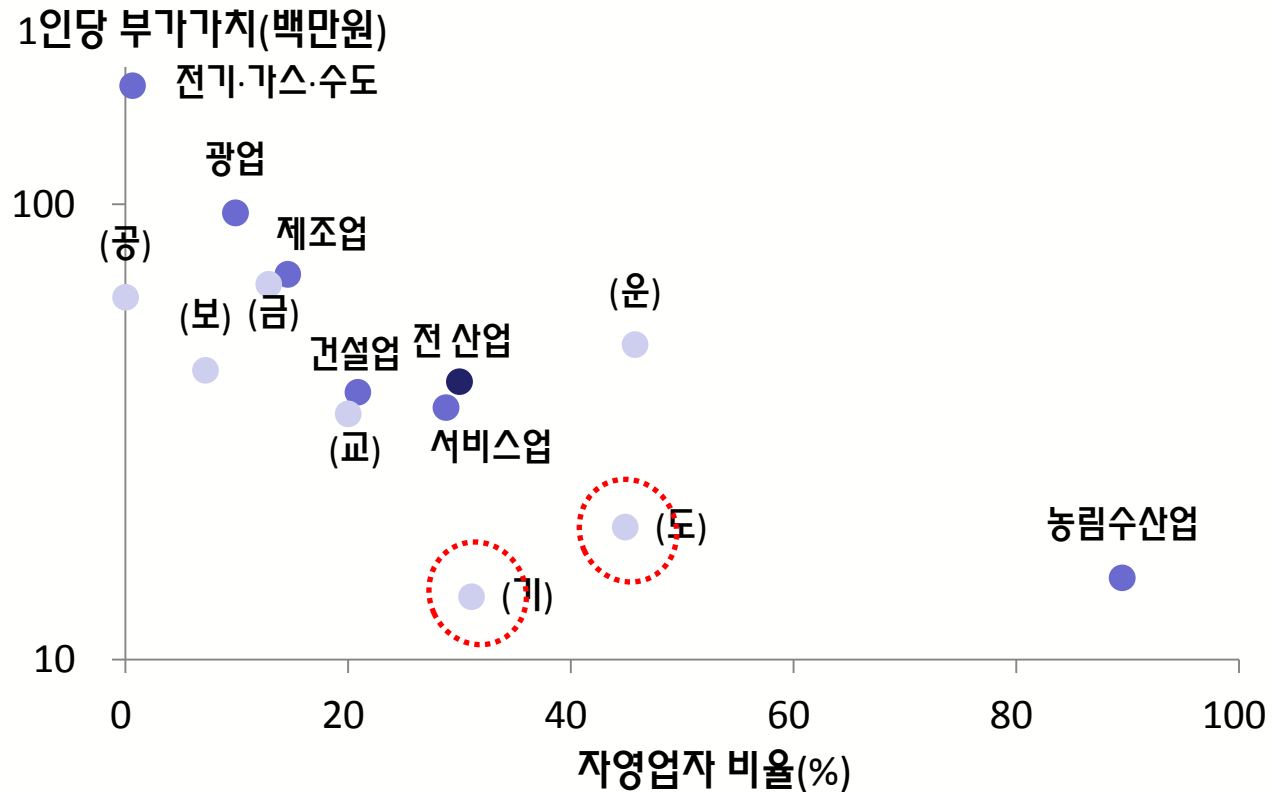
제조업 고용비중



자료: OECD STAN Database.

특히 전통서비스업은 저생산성과 영세성이 특징

노동생산성과 자영업자 비중(2009)



주: (도) 도소매·음식·숙박, (운) 운수·보관·통신, (금) 금융·보험·부동산·사업서비스, (공) 공공행정·국방, (교) 교육, (보) 보건·사회사업, (기) 기타 지역·사회·개인서비스.

자료: OECD STAN Database.

- 고부가가치 업종은 확대, 저부가가치 업종은 축소될 필요가 있으나,
 - 이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(고부가가치)과 규모화(저부가가치)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직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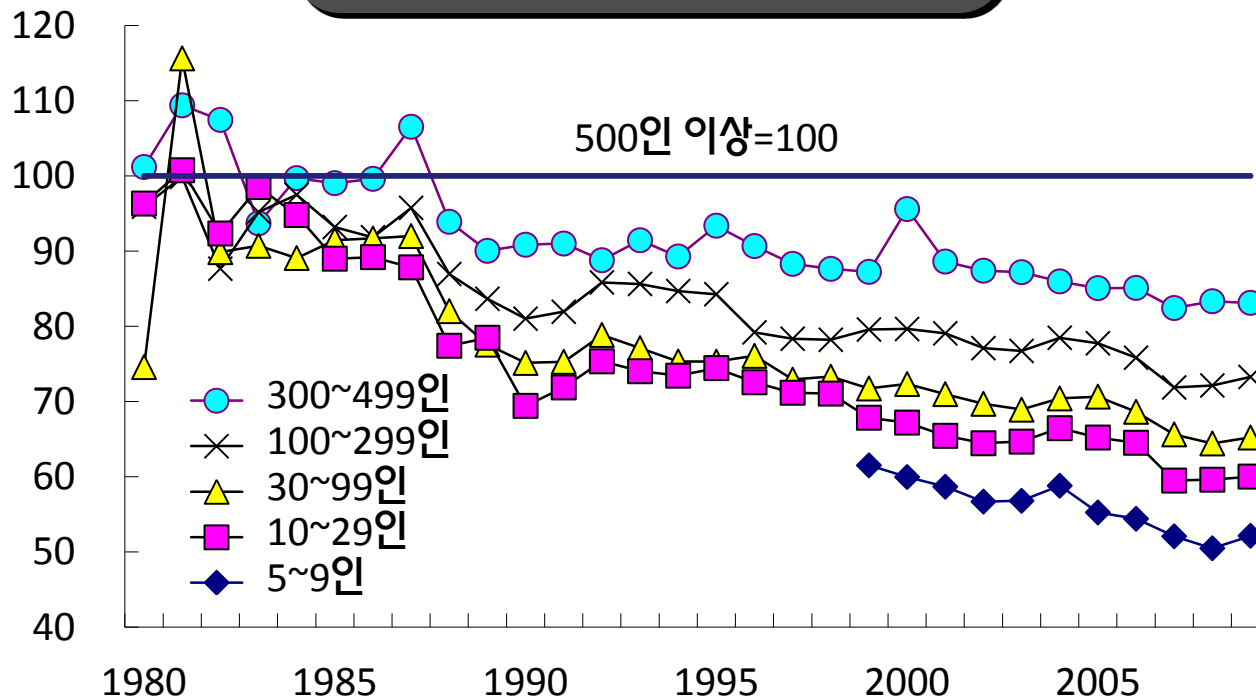
부가 가치	세부업종	1인당 부가가치 (백만원)	고용비중(%)		
			한국(A)	미국(B)	A-B
고	• 금융·보험·부동산·사업서비스	67(100)	19	22	-3
중	• 운수·보관·통신 • 공공행정·국방 • 보건·사회사업 • 교육	45 (68)	32	42	-10
저	• 도소매·음식·숙박 • 기타 지역·사회·개인서비스	18 (27)	50	36	14
서비스업 전체		36 (54)	100	100	0

주: 2009년.

자료: OECD STAN Database.

- 중소기업의 임금은 1990년대 이래 대기업 대비 계속 하락
 -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의 상황은 중소기업보다 더욱 나쁜 것으로 추측됨.

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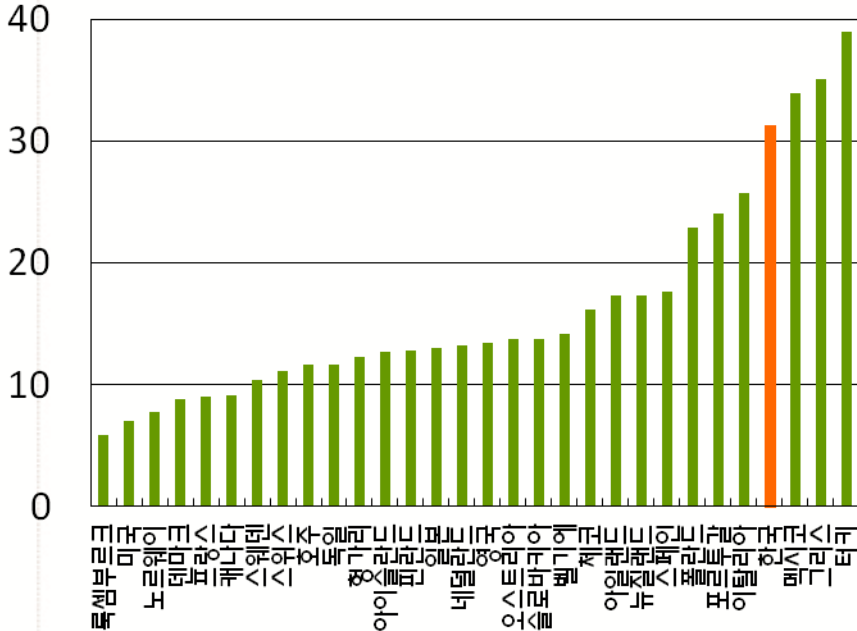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.

우리나라는 영세기업이 매우 많음.

-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(약 30%)은 OECD 국가 중 최상위

자영업자 비중(2008)

(전체 근로자 대비, %)



자료: OECD.

- 전체 근로자 2,400만명 중 1~4인 기업 40%, 5~299인 52%, 300인 이상 8% (2010, 통계청)
- 제조업에 국한할 때에도 영세기업의 고용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

기업규모별 고용비중 (제조업, 2002)

(단위: %)

기업규모	한국	영국	독일	일본	프랑스
1~9인	43	10	7	11	12
10~249인	44	45	38	58	41
250인 이상	13	45	55	31	4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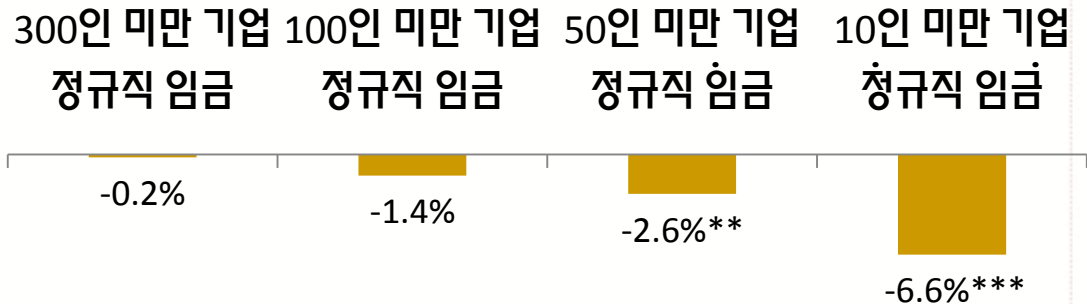
자료: OECD, SME and Entrepreneurship Outlook, 2005.

비정규직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문제

■ 중소기업:
정규직이라도
임금이 낮고
사회보험 가입률이
낮음.

■ 대기업:
비정규직이라도
임금과 사회보험
가입률이 높음.

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대비 300인 미만 기업 정규직 임금



주: 1) 성별, 결혼여부, 나이, 재직기간, 학력, 노동조합 가입여부, 직종, 산업, 연도 등을 통제한 후의 임금격차.

2) **는 5%, ***는 1%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.

3) 단순최소자승법(OLS)에 따른 추정결과. 개인의 보이지 않는 특성을 통제한 고정효과모형(fixed effect model)의 경우 임금격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.

자료: 이인재(2009), p.229.

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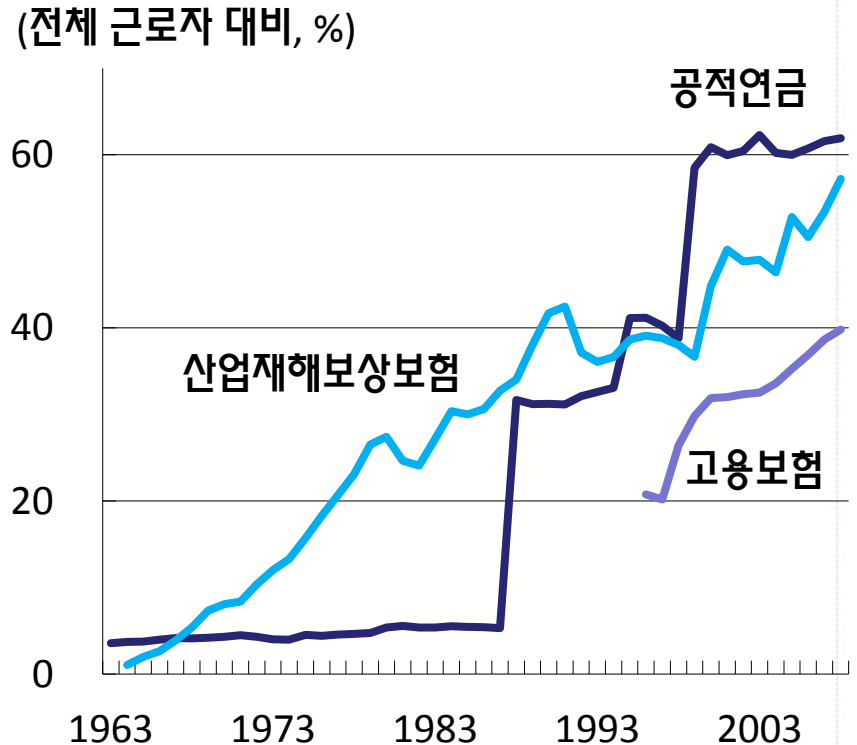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사업장(인)	1~4	5~9	10~29	30~99	100~299	300~	계
정규직	36	64	83	91	96	97	77
비정규직	18	36	64	80	84	81	52
계	29	55	77	88	93	94	69

■ 무수히 많은 영세기업의 존재로 인해 사회보험 확대에는 근본적 한계

- 2,400만 근로자 중 공적연금 가입률은 60%, 고용보험 가입률은 40%에 불과
- 미가입자는 대개 영세기업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,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변부를 형성
 -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핵심부(core)와 주변부(periphery)의 이중구조(duality)
- 정작 사회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집단이 보호에서 배제

사회보험제도의 가입률



주: 공적연금은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학연금을 포함.
 자료: 각 사회보험 관리공단, 통계청; Youngsun Koh et al.(2010).

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

-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부족이 문제

■ 낮은 수준의 인적 자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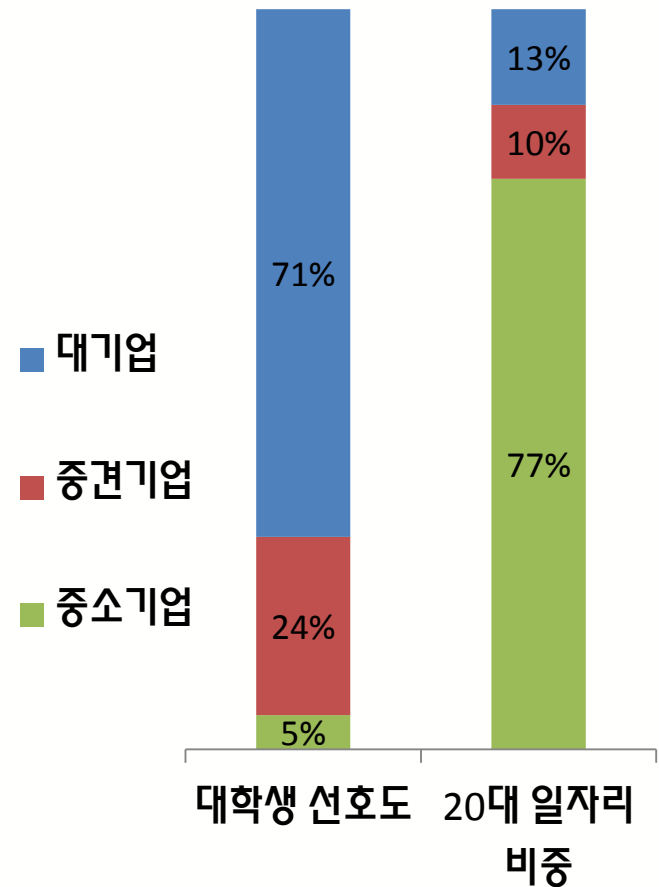
- 시장개척, R&D 등을 위한 인력 부족

■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인식

- 대졸자는 대부분 대기업을 선호
- 중소기업은 사회적 약자, 보호의 대상

■ 정부의 부적절한 지원

- 과도한 금융·세제 지원 때문에 대기업으로 성장할 유인 미흡



자료: 한국고용정보원, 『고용보험통계연보』, 2008; 김희삼(2012)에서 재인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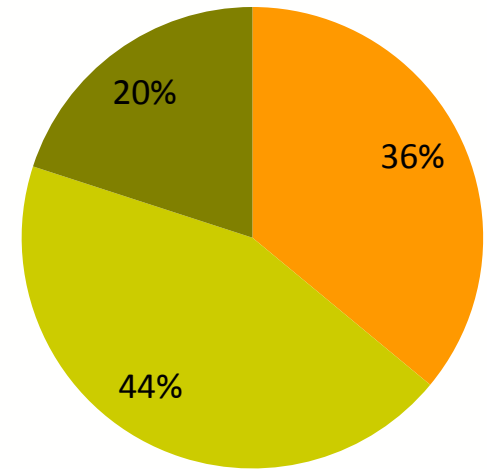
■ '성공'을 위한 한줄서기 경쟁

- 60만 수험생 중 0.4%→서울대, 1.6%→SKY, 9.9%→서울, 19%→수도권
- 한 해 대학(원) 졸업생 56만명 중 2~3만명 → 공기업, 대기업 등 '좋은 일자리'
- 배우자가 근무했으면 하는 기업형태 (직장인 대상 설문조사, 잡코리아, 2011)
 - 공기업 42%, 대기업 35%, 외국계 기업 9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6%, 벤처기업 1%

■ 진학, 취업, 결혼 등에서의 좌절은 인생의 패배감으로 귀결

- 44%가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식

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쟁¹⁾에서 이겼나?



■ 이겼다 ■ 그렇지 않다

주: 1) 사업, 취업, 입시, 결혼, 승진 등.
 자료: SBS/갤럽 경쟁 관련 국민의식조사, 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2011.9.16~10.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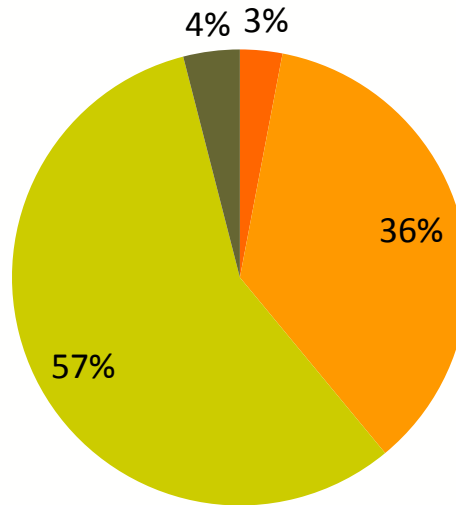
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 확산

■ 61%는 경쟁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

■ 동시에 재분배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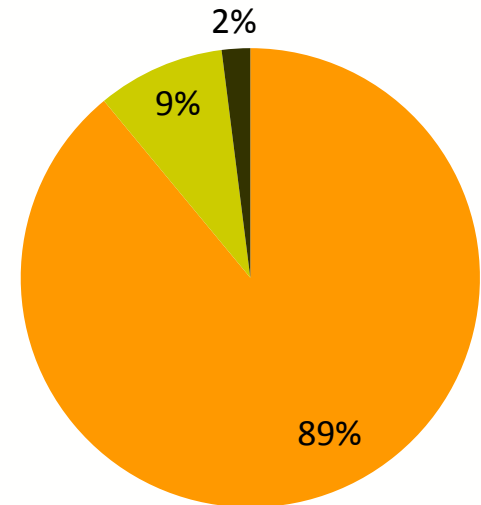
● 89%가 복지확대에 찬성

균등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는가?



-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
-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
- 별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
-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

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가?



- 필요하다
- 필요하지 않다
- 모르겠다/무응답

자료: SBS/갤럽 경쟁 관련 국민의식조사, 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2011.9.16~10.5.

- 이처럼 사회통합(social cohesion)이 약화되면 집단 간 갈등이 심화되고 정책선택이 왜곡될 가능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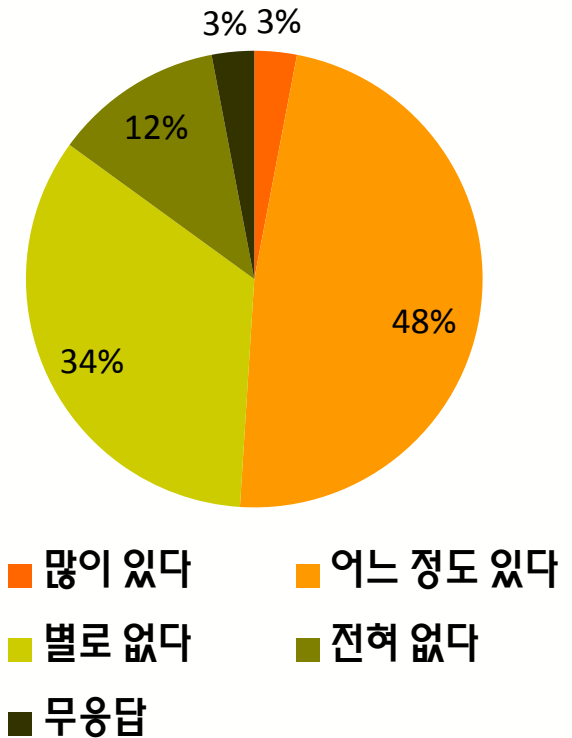
- 예컨대 '반값 등록금'은 대졸실업 문제를 악화시킬 것
 -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오히려 투자확대가 필요한 시점
 - “대학 다녀봐야 취직도 안 되니 등록금이나 깎아달라”는 주장에 동조하기보다,
 -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

■ 또 다른 예로서, 89%가 복지확대를 원하나, 51%만 세금을 더 낼 의향

■ 그러나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고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부담 증대가 불가피

- 현재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약 40%가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음.
- 광범위한 세부담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증가

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가?



자료: SBS/갤럽 경쟁 관련 국민의식조사, 19세 이상 남녀 1,000명, 2011.9.16~10.5.

우리나라는 소득세 부담이 매우 적은 나라

-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세수는 OECD 평균의 1/2 수준

- 그 주 요인은 세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비과세·감면이 많기 때문

- 개인소득세(국세+지방세) 최고한계세율(2010): 한국 35.3%, OECD 평균 39.6%

OECD 국가의 항목별 조세수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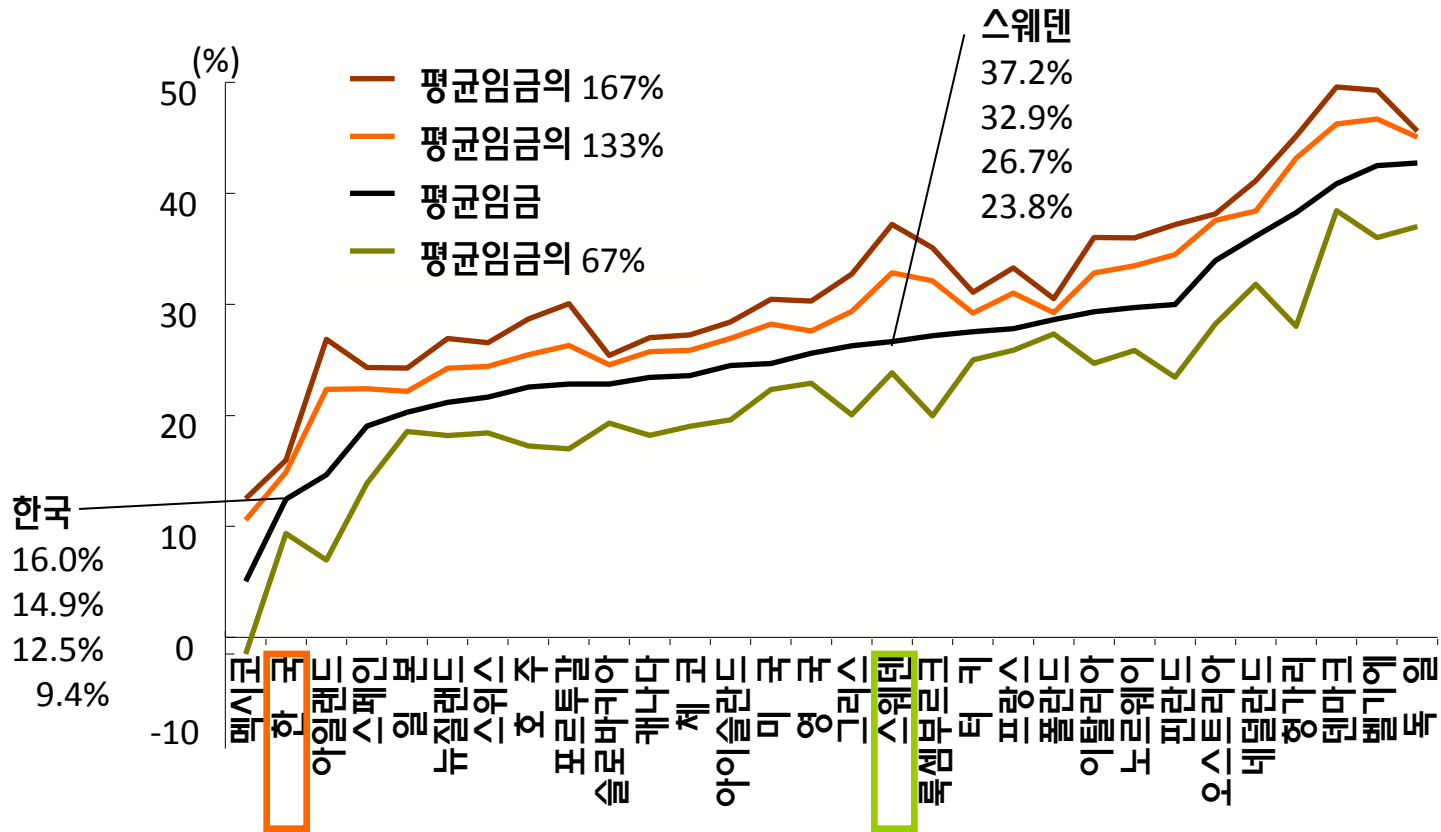
(단위: GDP 대비, %)

	OECD (2007)	한국 (2008)
개인소득세	9.1	4.0
법인소득세	3.9	4.2
사회보장기여금	9.0	5.8
재산세	2.0	3.2
일반소비세	6.7	4.3
특별소비세	3.8	3.9
기타	1.4	1.2
계	35.8	26.6

자료: OECD, Revenue Statistics, 2010.

선진국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부담도 높은 편

소득 대비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부담(2008)



주: 1) 중앙 및 지방정부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합. 피부양자가 없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.

2) 평균임금 = 전일제(full-time) 산업부문 근로자의 稅前 임금.

자료: OECD, OECD Tax Database, 2009.



한국경제의 탈출구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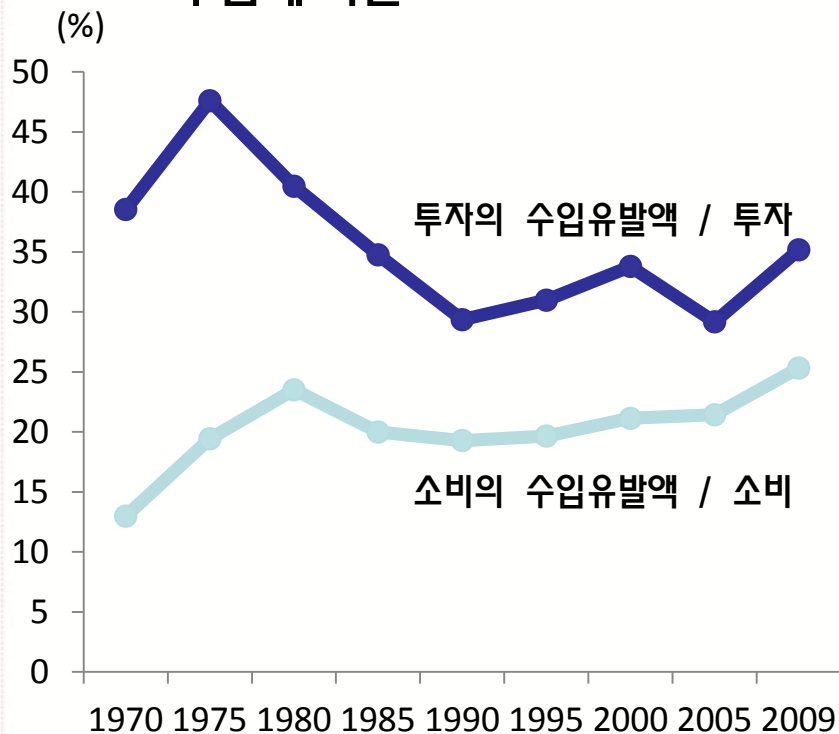
-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세계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른 생산성 향상을 달성
- 추격형(“catch-up”) 성장단계의 종료에 따라 생산성 향상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대두
- 이런 관점에서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부진은 심각한 문제
- 구조조정 촉진정책이 필요하나, 쉽지 않음.
 - 구조조정: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인력·자본 이동, 영세기업 감소
 - 저생산성 분야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, 보호하고자 한다면 구조조정은 불가능
 - 그러나 한국 특유의 현상인 대기업집단(재벌)으로 인해 구조조정은 사회적 이슈화
-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책선택이 왜곡될 가능성 증가

한국경제에 대한 오해(1):

“수출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.” “수출이 너무 많다.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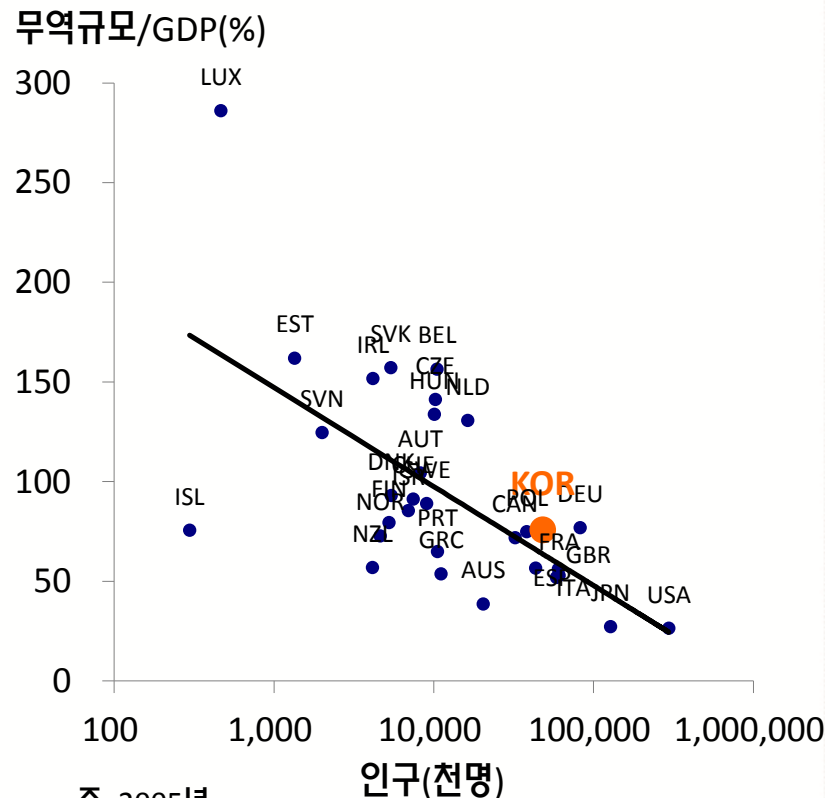
■ 수출이 없다면 수입이 불가능

- 소비의 25%, 투자의 35%를 수입에 의존



자료: 한국은행, 『산업연관표』, 각년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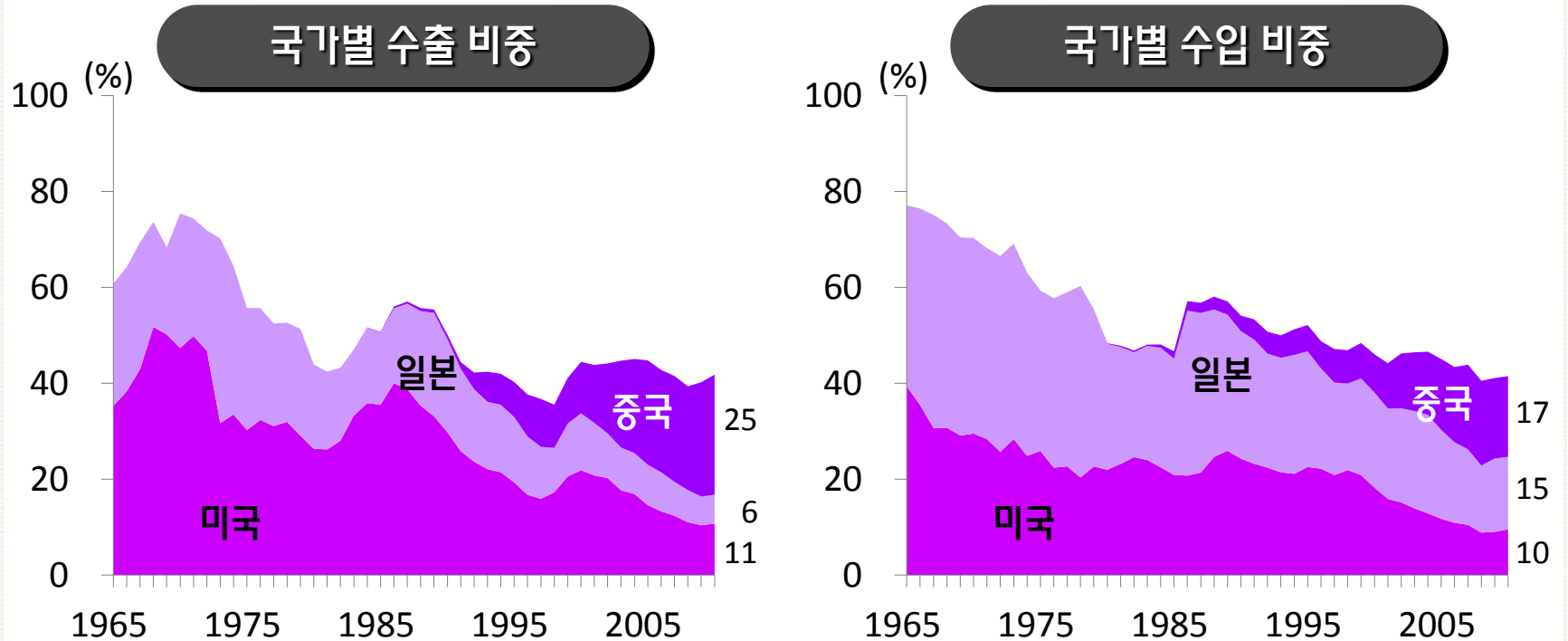
■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로 보아 무역규모가 지나치게 큰 것도 아님.



주: 2005년.
자료: OECD, UN.

국제무역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여전히 중요

- (예) 영화산업 개방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
- (예)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최대의 교역 파트너
 -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나 동시에 우리에게 넓은 수출 및 수입 시장을 제공



자료: 통계청.

한국경제에 대한 오해(2)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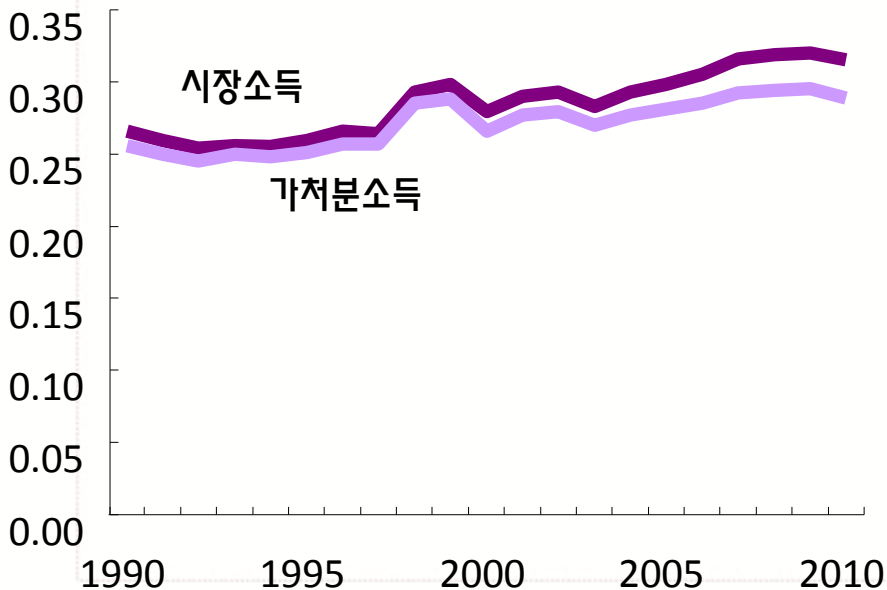
“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구조조정으로 분배가 악화되었다.”

■ 소득분배는 1990년대 초부터 악화되었고, 자살률도 이때부터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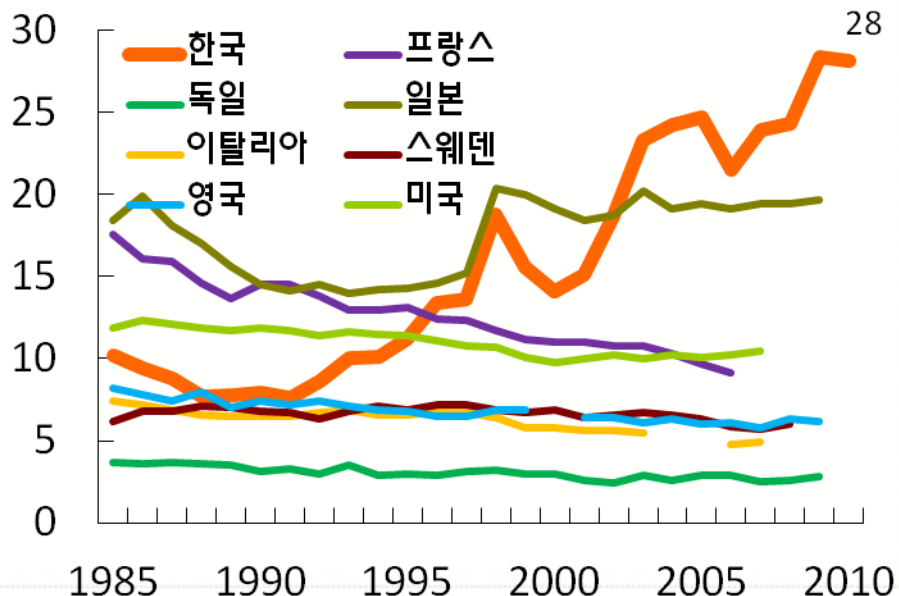
- 가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: 1992년 0.245 → 2009년 0.295 (+0.05p)
- 상대빈곤율: 1992년 6.5% → 2009년 13.1% (+6.6%p)

지니계수

OECD 국가의 자살률



(인구 10만명당 자살)



자료: 통계청.

자료: OECD.

- 분배악화는 1990년대 말의 소위 ‘신자유주의적 개혁’ 때문이 아니라 1990년대 초 이래의 ‘탈산업화’로 대표되는 구조변화 때문
 - 제조업-서비스업 간, 대기업-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는 시점과 분배악화 시점이 일치
- 지표상 우리나라의 고용보호 수준은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
 - 특히 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는 33개국 중 18위로, 적다고 말할 수 없음.
 - 고용불안은, 노동법이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등 노동시장의 주변부(periphery)가 과거부터 널리 형성되어 있기 때문

OECD 고용보호지수(2008)

	상용직의 개별적 해고에 대한 규제	임시직 고용에 대한 규제	집단적 해고에 대한 규제	계
33개국 중 한국의 순위	21	18	4	15

주: 순위가 높을수록 고용보호 수준이 낮음.
 자료: OECD.

■ 초·중등 교육

- 교육과정과 평가 및 입시를 향후 경제·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설계
 -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로서의 적절성(relevance) 확보
- 사교육과 대결·경쟁하기보다 공교육의 본분(창의·인성교육)에 충실
 - 사교육은 높은 교육열의 한 단면으로서 억제하기 어려운 존재
 - 교육과정 및 입시 개혁을 통해 사교육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
-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공급을 위한 학교 단위의 자율과 책임 강화
- 우수교사 육성 및 책임감 함양
-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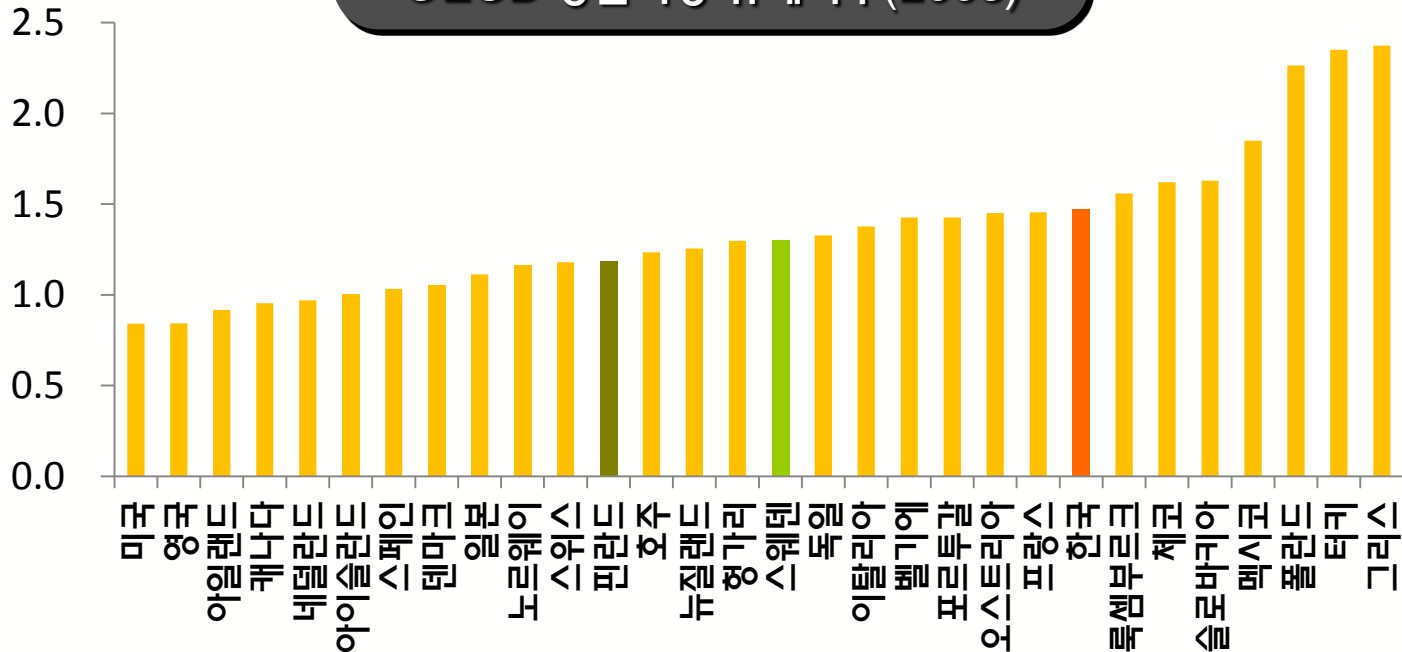
■ 고등교육

- 투자 증대가 필요한 상황, '반값 등록금'보다 '교육서비스의 질적 확충'에 초점
-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 추진 및 학내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
- 실무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및 취업지원 역량 확충
-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한 대학 평가 및 유인 체계 구축

- 성장촉진과 분배개선을 위해서는 중소기업/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가 절실
- 시장친화적(market-friendly)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
 - 대외개방 확대
 - 세계화(globalization)는 우리가 타고 넘어야 할 파고(波高)
 - 규제개혁, 경쟁정책 강화
 -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 추진,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확대
 -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행위 엄단,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·공정한 법 집행
 -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
 -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보다는,
 -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규모화를 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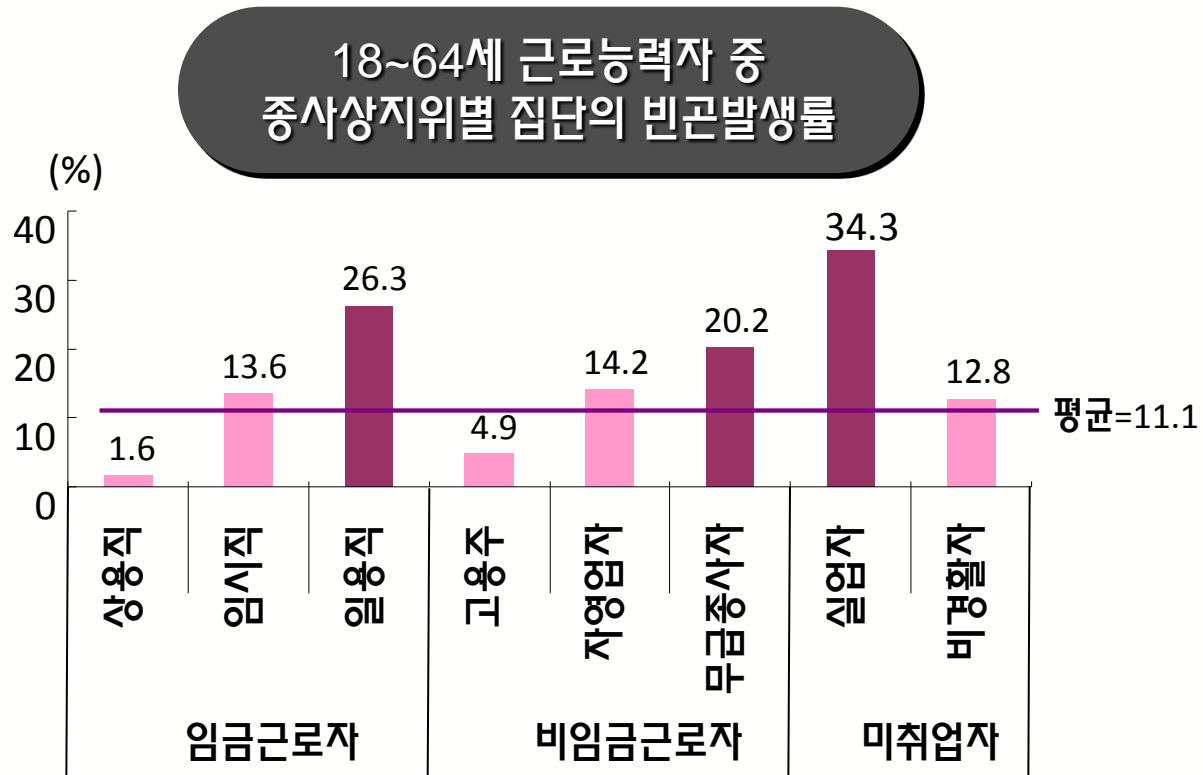
- 1990년대 초의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 추진
 - EU 가입(1995), 소매 및 은행 부문 규제완화 등
 - 우리나라보다 상품시장 규제가 훨씬 적은 편

OECD 상품시장 규제지수(2008)



주: 상품시장규제지수는 규제가 가장 적을 때 0, 가장 많을 때 6의 값을 가짐.
 자료: OECD.

■ 일용직, 무급종사자, 실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빈곤의 위험에 크게 노출



주: 경상소득 기준.
 자료: 노대명 외, 『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』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09.

■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및 근로능력 제고

- 공공부조제도에 내재되어 있는 근로저해유인 제거
- 적극적 노동시장정책(ALMP) 강화: 공공고용서비스 확대, 직업훈련 내실화

■ 중산층에 대해서는 시장기구를 통한 서비스공급 활성화

- 정부가 재원조달과 서비스공급을 모두 담당하기보다,
- 시장을 통해 수요자 지향적인 서비스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,
- 시장실패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

■ 균형재정 유지를 위해 지출억제와 세원확대 추진

- 사전적 타당성 분석 및 사후적 성과평가 강화
-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원 확대: 비과세·감면 대폭 축소



감사합니다.